

#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준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이준형, 권영희, 김경영,  
김기대, 김기덕,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평남,  
노승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양민규,  
이광호,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호대,  
임종국, 전석기, 최 선,  
한기영, 황규복 의원(26  
명)

## 1. 주문

-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회에 이같이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한 실정임.
- 이들 3개 법안은 이익과 효율 중심의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이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제공, ▷기부, 후원, 자원 봉사 등 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착한 소비’와 같은 윤리적 소비시장 확산 등의 정책 실현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처럼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3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이었으나, 이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노동이나 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 이들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함. 이들도 일반 기업처럼 재화와 용역의 생산·판매 등 경제활동을 하는 엄연한 기업들이지만, 경제적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나 기본 원리도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 3. 이송처

- 가. 국회: 국회의장,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 나. 정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판이었으나, 이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이 같이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때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빈부격차·고용 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착한 경제”라고 언급한바 있다.
- 서울시에서도 그간 사회적경제 현안 및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와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학술연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측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해왔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지원 고도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그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시켜 왔다.
- 사회적경제 3법이 제정되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된다면,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고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